

칼럼

장기채 주필



### 생산인구 감소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저출산·고령화의 과고가 거세다. 15~64세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한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섰다. 경제 활력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한국 경제 성장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다. 출산율 이대로 간다면 2100년엔 인구 절반이 노인 된다는 통계 수치가 나온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재앙을 코앞에 두고 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생산과 소비위축, 경제 활력 저하로 잠재성장률은 추락하고, 보장성 부담은 늘어나는 격랑에 빠지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1.21%의 출산율 때문이다. 또 2019년부터는 총인구마저 감소하는 '인구절벽'으로 떨어진다. 요즘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뭐니 뭐니 해도 저조한 출산율일 것이다. 최근 10년간 출산

율을 보면 그 수치가 엄청날 정도로 낮아지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거기다 2015년 우리나라 남녀 평균 초혼 연령은 전년에 비해 각각 0.2세씩 증가해 남자 32.4세, 여자 29.8세로 집계됐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녀 84%(복수응답)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82.4%), '집 장만 등 결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77%)가 그 뒤를 이었다. 지속적으로 맞벌이 가정들이 늘어나고 당장 결혼하여도 아이를 기질 여유가 안되는 지라 산모의 출산까지도 갈수록 늦춰지고 있다. 유아기 때부터 조기 교육들이 대세를 이루면서 이제는 아이 하나 성장시키려면 돈이 비교되는 수준으로 치솟은 게 한국의 저조한 출산율의 한 몫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에게 마음 놓고 연애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전방위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돈과 집 문제다. 무턱대고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임대주택과 주택금융, 각종 세목을 절감시켜 평생 아이들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택 인프라 확충이야말로 저출산을 극복하는 열쇠라는 것이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는 젊은 인구의 도시유출 때문이기도 하다. 2013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이었다. 2001년 이후 우리나라는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대로 가면 2100년엔 노인이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될 것이라는 '인구 위기' 전망이다. 따라서 노인인구 급증과 일할 수 있는 인구 급감이 함께 진행되면서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된다. 생산 가능인구 100명이 먹여 살려야 하는 노인인구(노인부양비)는 2010년 15.2명이었다. 출산율이 답보 상태면 2030년엔 노인부양비가 배 이상 증가해 38.7명이 된다. 2070년엔 젊은이 100명이

노인 99.1명을 2100년엔 108.9명을 먹여 살려야 할 정도가 된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출산율을 2.1명까지는 끌어 올려야 한다. '출산율 2.1명 유지' 시나리오에 따르면 총인구는 2100년 1309만 명을 예측된다. 초저출산 시나리오보다 총인구가 2087만 명 많아지는 것이다. 인구 위기를 예방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출산율 회복뿐이다. 또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이고 교육, 안전, 고용, 보건복지 등의 영역을 개혁해 출산과 양육이 고통보다 즐거움과 희망을 안겨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고 봐야 한다. 애꿎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 수준과 맞물려 미래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리도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같은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본은 계속 고용 제도와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 연장의 충격을 흡수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는 성장만을 강조해 왔다. 이제는 인구 자체가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사실에 귀 기울여야 한다. 생산인구 감소는 강 건너 불이 아니기 때문이다.

## 社 說

### 국민은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다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 폐렴'이 국경을 넘어 한국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중국 당국이 한국인의 입국을 막고 강제 격리에 들어가 충격적이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된 이유는 애초 중국에 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을 의식해 '우한 폐렴' 대신 '코로나19'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을 쓴다. 많은 전문가들이 서둘러 중국인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우리 정부는 묵살했다. 심지어 국내에서 마스크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국민들이 제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는 품귀현상마저 생겼으나 문제인 정부는 국내 마스크 공장을 싹쓸이 하면서 무려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바쳤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62개 국가가 중국인과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자국민의 중국 방문을 막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살피며 한참이 지난 뒤에야 '후베이성을 2주내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라는 시늉만 했다. 이 때는 이미 중국 스스로 후베이성을 봉쇄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후베이성을 방문한 사람이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은 0%였다. 이토록 우리는 중국의 눈치를 살폈는데 중국 정부는 국내 확진자가 늘었다는 이유로 가차없이 한국인을 내쫓고 있다. 우리 정부가 자국민보호보다 중국의 자존심을 더욱 걱정했지만 돌아온 것은 뺨이 석 대다. 이제는 중국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의 입국 금지 움직임이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 한국과 가까운 베트남조차 한국인을 격리시키고 있으며, 아프리카 작은 섬나라 모리셔스에서 한국인 관광객에게 수도를 줬다. 이처럼 분분 터지는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저자세' 모드를 준수하고 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문제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겠는가.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파티만 할 게 아니라 피를 토하는 국민들의 고통에 이제라도 답을 내놓아야 한다.

####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알고을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자재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회 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호칭 인권존중 관점 접근 어떻게

흔히 현 시대를 탈북민 3만명 시대라고 말한다. 말 그대로 3만 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힘겹게 사선을 넘어와 내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으로 무난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상당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정착 후 가정을 꾸리고 어엿한 사회적 지위도 가지며 안정적인 정착을 하고 있고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현실에 우리가 그들을 부르는 호칭은 과연 적절한가 살펴보고 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란 용어 사용 전 1962년에는 월남귀순자로 불렸다. 그러다 이후 귀순용사, 귀순북한동포, 북한이탈주민이란 용어가 속속 등장하더니 2005년 정부에서 새로운 터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새터

민이란 새 용어를 만들었지만 일부 반대 여론에 부딪히며 현재는 사용을 자제하면서 언론이나 우리 주변에서는 탈북자, 탈북민, 탈북인,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등 그동안 등장한 각가지 호칭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다. 일부 단어는 우리나라에 입국 해서도 우리와 동화되지 못하는 별개 집단으로 해석하기 딱 좋은 표현이 아닐까 한다. 우리가 평소처럼 습관화 되어 그들을 부르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듣기에 불편

하다면 오히려 반발을 살수도 있기 때문에 호칭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그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해질수록 결국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에서 차별과 소외감만 느끼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진정 위로와 애정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북한이탈주민이나 ○○씨, ○○대리님 등 우리 주변 모두가 사용하는 평범하고 무난한 용어사용을 권장하고 싶다. 북한이탈주민을 우리와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수 있는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김덕형 / 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문화응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